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제 폐지 검토”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여야, 소득주도성장 공방 국민연금 제도 개편 화두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엄호했다.

여야는 김홍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이사장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보복 인사를 일삼았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전일 정권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근거 없는 흠집을 내고 있다며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화두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민주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안 제출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의 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올리면 전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서울대의 대입 전형 개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

이 이어졌으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대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여야 모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기전수 병무청장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이 “대한 에어로빅연맹이 유사단체를 만들어 놓고 수년째 선수들의 연봉을 착복해 왔다”고 폭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호통’ 벗고 ‘소통’ 입다

민주당 대표 취임 2개월 강경 발언 자제 현안 주도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급 확대 주문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지공개

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는 25일로 대표에 취임한 지 두 달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취임한 이 대표는 그동안의 ‘호통’ 이미지를 벗고 ‘소통’하는 당 대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피하지 않아 ‘호통 총리’, ‘버럭 해찬’ 등의 별명을 얻었다. 또 당내에서도 소신대로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는 성격 때문에 취임 전에는 당내 소통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대야(對野) 강경 발언을 되도록 자제하고 당내 소통 강화에 주력하며 기존 이미지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했다.

이 대표의 이미지 변신은 전당대회 공약인 ‘강한 여당’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현안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당의 모습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한 해 서너 차례 정도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를 매달 열자라 제 안에 관철했고, 주요 정책마다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며 현안을 이끌었다.

방 이전, 토지공개
남 실질적 도입 발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지 해제 검토’ 발언을 끌어낸 국정감사 질의 등 의제 설정의 중심에도 이 대표가 있었다.

이 대표는 당내 소통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취임 후 현안 챙기기와 스킵식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금까지 의외로 ‘행안위-정무부-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각자 점심 자리를 가졌다. 국정감사로 잠시 멈춘 상임위별 오찬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로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아직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된다. 정국을 열어볼 계획은 아니지만, 간간이 나오는 이 대표의 ‘야당 자극성 발언’도 협치에는 감점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드루킹 공범인가”... 김경수 “개인 국감 아냐”



국감 현장 행안위 경남도청 국감 한국당 드루킹 질문 공세 민주당 “국감 취지 어긋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안쟁을 벌였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을 거론하며 “경인선 지지”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수행팀장을 한 김 지사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 소개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필요한 질문만 하라”고 제지했으며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영상이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틀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영부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특검 때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조 의원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오늘은 경남 도정을 국감 하는 날이지 개인 김경수 국감이 아니다. 국가직원을 받는 예산, 국가 사무 부분에 대해서

는 충실하게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중정이라면 고맙게 받았지만 허위사실과 잘못된 내용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밝힌 거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의 유감 표시에도 드루킹 관련 질의는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윤재욱(한국당) 의원은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며 공범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 공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드루킹 재판으로 도정에 지장이 있는지는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개특위 오늘 첫 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으며,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후반기 국회에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 정개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불거질 주목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증여세 탈루·장남 아파트 투기의혹 추궁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해 “과거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장남의 아파트 투기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장남이 살고 있던 전세를 빼주지 못해 실제로 거주하지는 못했고 1년만에 다시 팔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이 외조부에게 4800만원, 조 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손자가 22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친척들이 준 백일·돌 축하금, 용돈 등을 합쳐서 모은 돈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모두 증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남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에서 귀국한 장남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던 청문회가 개회조차 못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모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